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들 사실상 폐기 수순

21대 마지막 의사일정 합의 불발
광주 AI·전남 이민청 등 현안 산적
풍력발전법 상임위 심의만 3년
농수산법·여순특별법 등도 재논의

여야간 21대 국회 마지막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을 풀어낼 주요 법안들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내달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성공한다면 하더라도, 정치적 쟁점에 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광주·전남 민생 법안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은 물론, 현역들의 무더기 낙선으로 인한 동력 상실의 우려가 높다.

25일 광주·전남도 등에 따르면 미래 먹거리산업인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은 1년 넘도록 표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광

주시의 주력사업인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을 견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 대표 도시 광주를 완성시킬 데이터 중심 개방형 인프라 구축과 인공지능 중심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의 경우 올해 말 마무리되는 국가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과 연계해 순항 중이다.

또 광주의 가장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경우 겨우 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광주·전남도 간 의견 차이로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24일 열린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시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에서는 무안군 이전지 망운·운남면의 해안지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의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되면서 군공항 이전 논의가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됐지만,

무안군과의 소통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현역 의원 8명 중 단 한 명만 재선에 성공하면서 남은 임기 중은 고사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갈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남도의 경우 지방소멸 대응 원년을 선포하면서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전남도는 22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심각한 저출산 및 청년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광역단체 중 최초로 국(局) 단위 이주민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인민국'을 신설하면서 외국인 유치를 통한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결국 해를

넘기면서 이민청 신설에 대한 계획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새 법안에 대한 6개월 간의 경과규정을 감안하면, 이민청 신설과 입지 등에 대한 밑그림을 내년 초에나 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남도의 대표 사업인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의 경우 지난 2021년 5월 발의됐으나 3년여간 상임위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심의를 거듭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풍력발전산업 촉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남도가 덴마크 현지 업체들과 30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터빈공장 목포신항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과 상반되며 더욱 아

쉬움을 낳고 있다.

이외에 인구 감소 지역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 감소 지역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여순사건 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역사왜곡과 관련해 기획단 해체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가 기념일 지정과 특별재심 근거를 마련, 진상 규명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도 상임위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곽지혜·김은지 기자

광주 당선인들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원팀”

시,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행사
AI 등 11개 현안사업 협조 요청

제22대 총선 광주 당선인들이 지역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광주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초청해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를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를 전진숙·광산갑 박군택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 7명이 참석했다. 광산을 당선인인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국회 일정으로 불참했다.

광주시는 당선인들에게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어벤져스캐릭터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11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대표적인 현안 사업은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대한민국 AI 실리콘밸리 조성,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무등

산 정상 전면 개방,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이다.

또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 확산, 기후 위기 대비 영산강 먹는 물 활용사업, 광주 선지하화 및 상부개발 국가계획 반영, 일부 국가 기관의 지방비 분담 개선, 삭감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정상화도 건의했다.

당선인들은 “각자 공을 내세우기보다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공감한다”며 “8명이 한 몸이 돼 예산을 확보하고 공통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 ‘광주 전략회의’를 구성해 지역 단체장·국회의원·시의원들이 함께 지역 발전 방안을 고민·제안하는 기회를 늘리고 지역소멸 문제 등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강기정 시장은 “국회의 도움 없이 광주의 변화와 발전은 한발자국의 진전도 이룰 수 없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국비예산 확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군공항 이전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고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시 당선인들이 25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선인 환영 행사에서 산뜻한 출발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 노사민정 ‘일하는 모든 사람 존중’ 공동선언

광주시는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 선언을 했다.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성공시킨 광주의 노사상생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존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고도화해

투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광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노력과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광주시 노사민정은 노동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시 노사민정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기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휴식권 보장 등의

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광주시는 일가정 양립본부 기능을 강화해 제도 및 기업문화 개선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광주형일자리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노사 상생문화 강화를 위해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들의 주거비 인상을 결정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주거비 10.3%를 인상해 대리 이하 근로자 및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과장급 근로자 590명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노병기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